환경부담금 소폭인상 조정

환경부, 통산부의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 대폭수용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 및 예치금 인상안이 경기후퇴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96년들어 쓰레기 발생량저감을 위해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앙등과 경기후퇴 등을 감안, 상당부분 취소하거나 현실에 맞게 부담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TV · 세탁기 · 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대당 30원씩 걷던 폐기물예치금을 TV는 90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5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냉장고에도 새로 70원의 예치금을 물릴 계획이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4종 모두 38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크기에 따라 개당 1.5~3원씩 부과하던 유리병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을 개당 3~7원으로 2배 가량 올리려던 계획은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살충제 용기, 과자봉지, 껌,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제품 등에 매기는 폐기물 부담금도 100% 안팎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퍼내 만드는 술과 청량음료에도 새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던 계획 역시 적정요율을 상징적 수준으로 정하고 시행시기도 98년 이후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황산화물 · 먼지 · 암모니아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불소화합물 등 1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총량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산부 등의 반발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해 배출업소의 부담을 크게 낮춘 바 있다.

<화학저널 1996/10/28>